

국내외 환경정책과 기업의 역할



李相驥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I.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환경문제는 고대에서 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대량생산, 도시밀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는 바 서구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제국은 양적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구했고 대량생산/소비, 안락과 편의위주의 생활양식,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高환경부하형 제품개발,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경험해왔다. 합성세제, 살충제, 일회용 상품에 관련된 기술 등과 대량생산/소비를 뒷받침해주는 생산구조와 생활양식에 관련된 에너지 다소비형 기술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인구증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지금까지 150만년 동안 존재했던 延인구는 600-1,000억 명 이었고, 이 중 현존 인구(약 53억)가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의 인구증가는 대단히 급격했음을 말해준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망을 감소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출산을 감소가 병행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의 정체 현상이 비교적 신속히 일어난 반면, 후진국에서 사망율이 출산을 하락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직까지 상당한 인구 팽창을 겪고 있다.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밀집화를 가져왔고 이는 한정된 지역에 오염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제한된 시간과 지역에 오염물질을 발생케 하여 그 피해의 강도를 높게 했다.

이같은 환경문제를 우리나라는 더욱 힘겹게 겪고 있다. 서구에서 200-300년, 그리고 일본에서 약 80년이 소요되었던 산업화를 우리는 약 30년 만에 최소한 그 초기 단계 진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5년 동안 GNP는 년평균 9% 이상의 성장을 보여 주었고 에너지 사용량도 6배 이상을 기록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 또는 여타 개도국에 비교해도 국토가 협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이같은 경제성장이 물질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 팽창이 많은 환경오염을 초래했고, 그리고 현재의 오염 실

태가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노출된 오염 피해외에 더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생활주변이나 산업현장 도처에 잠재해 있음이 틀림없다.

제반 경제활동(생산활동/소비활동)과정에서 우리는 부산물을 배출한다. 경제활동의 수준과 규모가 미약했을 때는 이같은 부산물의 배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출되는량이 적고 배출속도가 느리면 자연의 일부로 환원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출된 오염 물질은 어디론가 가서 싸여지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세대의 배출된 오염 물질이 지금 우리들에게 피해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의 폐기물이 누적되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이런 관계로 기업활동이 곧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시장경제 구조에서, 기업부문의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여하히 효율적으로 해소되느냐가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 국제적 환경 보전 움직임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문제가 여타 국가보다 덜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국제적인 환경 관련 움직임으로부터 영향받은 바가 크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그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자면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人間環境會議에서 인구 증가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 차로 인해 환경문제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리적 계획'과 '종합적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선언문 채택으로 종결되었다. 소득이라면 UN環境計劃(UNEP)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다.

이어 환경과 자원보전을 위한 국제聯合(IUCN)이 1980년에 UNEP에 제출한 보고서 「The World Conversation Strategy」에서는 개발과 환경보전은 조화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해서 환경관리인. 1992.6

소위 지속가능발전의 윤곽을 제시했다. 유엔총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게 (Our Common Future)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보다는 진일보된 지속가능발전(ESSD) 개념이 정리되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20년 전에 제기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식과 곧 열릴 UNCED에서 기대되는 분위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선 범지구촌 차원의 대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종 환경문제가 국가 영역 외로 확대되면서 국가간의 협조,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번째로, 환경문제가 급속히 주요 국제정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脫이데올로기시대, 脫냉전시대에 새로운 이념적 규범으로 등장해 색다른 국제협력 과제로 부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브라질의 UNCED회의를 계기로 환경과 개발 전망을 위시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시화를 가능케 하는 기본원칙의 채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이같은 이념적 문제는 현실적인 국제정치와 국제교역상의 새로운 남북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환경규제는 선진 개도국간의 발전 격차를 항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기술이 선진국 기업에 독점되어 있어서 그 가능성을 더욱 질게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금까지의 환경오염 책임을 추궁하고 대체기술의 무상지원과 재정지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선진국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어쨌던 앞으로의 국제적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속력 있는 규범제정과 환경협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몬트리얼의정서와 바젤협약은 이미 협정을 마쳤고 각국의 경제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로는 가입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몬트리얼의정서에 의해 5월부터 CFC 등의 사용감축이 불가피하며, 바젤협약에도 가입준비를 위한 작업이 추진중이다.

금번 UNCED에서 「리오선언」과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21세기 강령(Agenda 21)”이 채택되는 경우 지구환경 보전 논의가 일층 가속화될 관측이 짙어서, 비단 당장 직접적인 부담은 없으나, 개발정책추진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보다 더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산림보전, 해양 생물자원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독성화학물질규제 등 향후 구속력있는 협약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현재 협상 진행중인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보호 협약도 UN-CED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여기에 재정지원, 기술이전과 같은 공동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야간 UR협상 이후에 Green Round를 개최하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를 정식 논의하자는 주장이 선진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Ⅲ. 국내환경정책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했나,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6천불을 상회하며 중진국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수출입 규모로도 세계 1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더불어 각종 서서비스 업종의 개발로 시민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다. 복지면에서도 향상을 보여 전국민의 의료보험, 국민연금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도입·확장되어 가고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표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이 반드시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민주화와 관련된 제반 정치·사회문제는 덮어 두고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생존기반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983년도 까지 80만대에 못미치던 자동차대수가 1990년에는 340만여대에 이르렀다. 에너지 소비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에너지 GNP탄성치가 1을 훨씬 넘고 있

다. 90년도의 도시화율은 무려 78%에 접근해서 인구의 약 3/4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같은 경제활동의 규모확대와 밀집도 상승은 급격한 환경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오염지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나, 그렇지않다. 이미 60년대 초에 민간차원의 노력이 정책적으로까지 이어져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전담부서의 뒷바침이 뒤따르지 못했다. 1977년 「환경보전법」과 1978년 當法의 시행령이 각각 제정되었다. 1980년에 환경청이 신설되었고 1981년에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되었고, 1986년까지 환경보전법이 네차례 개정되었다.

60년대에, 더구나 70년대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으나 당시 분위기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를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더욱 뒷바침되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져 제5차계획(1982-1986)에는 환경보전이 공식적인 발전목표에 포함되었다. 제6차 계획(1987-1991)에서는 환경보전 부분에 대한 계획이 독립된 章의로서 수립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제정이나 계획수립이 세부시책으로 이어져서 또는 실효성 있는 노력으로 기울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환경개선 효과가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 환경오염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보전 관련제도와 기구의 정비, 계획 수립이 있었으나 명목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상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왕 모든 부문에서 정부 주도로 끌어왔으면 환경보전에서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미리미리 했어야 했다.

여러가지 제약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환경정책은 일단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보전법이 1990년에 몇가지 환경관련법으로 분산 개정되었고,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또한 환경백서가 출간되었고,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서 정부는 꽤 야심적인 환경정책을 펴 나가려는 것 같다. 오염유발부담금제, 폐기물 비용 예치금제의 도입과 아울러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환경정책의 큰 방향은 기준 강화,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으로의 전환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이 예고되었고, 앞서 열거한 각종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기술의 개발·소개에서 사전예방위주에 전력을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루라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에 입각한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환경부처 뿐만 아니라 개발부처에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제환경움직임의 압력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에서이기도 하다. 기 발표된 국가환경선언의 내용이 잘 응변해 주고 있다.

이같은 국내의 상황과 정책방향의 개선이 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어떠한 적응을 보여야 하겠는가.

IV. 경제/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각종 환경협약과 「리오선언」, 「Agenda 21」의 채택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그 중 금년 말부터 CFC 등의 오존층파괴 물질의 사용감축은 해당물질의 제조, 이용 산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선진국들이 기 개발한 대체 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국내개발 시기의 長短에 따라 그 피해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기후 협약에 의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감축이 심화될 경우 전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장기 자원 개발 계획도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선진국 중에서는 특히 북구 국가들 중심으로 이미 저성장의 궤도에 들어가서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서 개인당 국민 소득이 아직 \$6,000정도인 관계로 향후 상당 기간 고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투입의 增加도 피할 수 없다. 90년도에는 전년 대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14.1%에 달해서 그 기간 동안의 에너지-GNP탄성치를 1.5이상으로 올려 놓았다. 화석연

료의 의존도도 여전히 높아서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52.5%, 영국의 69.4%, 일본의 73.4%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규범이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준수가 강요될 때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오염자부담원칙 등과 같은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환경투자도 그 비중이 아직 저조한 상태이다. 한시 바빠 우리의 경제/산업구조도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CFC사용감축은 高價의 대체 물질의 수입이 불가피해 보여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 등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전반적인 경향은 UR가 타결 되더라도 앞으로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무역자유화 효과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의 환경정책도 오염자부담원칙, 기준강화를 중요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기업, 시민의 적응 능력과 태도로 보아 단 시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쫓아가기는 용이치 않다. 그렇다고 개도국과 같이 자금지원과 기술이전의 직접혜택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 경제는 이미 높은 자국내 환경규제 기준에 이미 적응을 마친 관계로 청정 환경 기술은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고 환경규제 기준 강화를 무역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 같은 환경기술을 보유치 않은 신흥 공업국에게는 선진국 진입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와 오염흡수원 파괴에 대한 책임 원칙의 도입, 환경기준이 약한 나라의 상품에 약한 기준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부과 등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외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여하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GNP에 플러스로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60년대 고도 성장기의 공해 대책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와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에서는 앞으로

**한시 바빠 우리의 경제/산업구조도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CFC사용감축은 高價의 대체
물질의 수입이 불가피해 보여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 등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전반적인 경향은
UR가 타결 되더라도 앞으로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무역자유화 효과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CO₂배출억제를 위해 에너지 절약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90년대의 에너지 공급 파동시에 맞먹는 절약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산업분야는 물론 요즈음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바뀐 가정·산업 부문에서는 소비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되, 화석연료중에서 가장 청정한 LNG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실용화 속도를 촉진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비중의 상승이 불가피하나, 선결되어야 할 여러 난제가 가로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밖에 도시구조, 생활양식도 적응을 해나가야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즉 우리의 경제/산업도 싫던 좋던 저에너지형, 환경보전형으로 전환되어가야만 하는데 그 속도와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상승되는 산업과 비즈니스기회가 되는 업종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규제 대상 산업도 재빨리 움직여서 기술혁신에 주력하면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

환경부담으로 비용상승이 발생하는 산업으로

는 전력부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CO₂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며, 운송산업도 교통망 재정비 등의 정책에 따라 엄격히 통제 될 것이 예상된다. CFC와 관련해서는 냉장고, 에어컨, 정밀기기, 반도체 등 사업의 생산 및 수출의 차질이 우려되며, 유전공학, 에너지 수급, 목재 산업, 수산업도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밖에 원양어업과 해양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틀림없다.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등장이 가능한 분야로는 공해방지, 환경보전장치, 환경계측기의 수요증대, 태양열 시스템 등 각종 자원절약·에너지절약, 신에너지 관련기기 비즈니스, 자원절약·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기물의 재자원화 등 청정산업의 비즈니스, 여유와 쾌적함을 추구하는 쾌적 환경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프레온 대체가스 등 규제대상 품목의 대체품시장, 알미늄,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신물질, 신소재 시장의 확대 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꾸준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V.기업의 환경 대책과 역할

최근 발표된 국가 환경선언의 기본원칙 6항에서는 기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실천을 위한 기본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7항은 산업/소비 활동에서 자원 절약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윤리성과 기업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동떨어진 별개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의 8항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정부와의 보완적인 역할을 지적했다. 비단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활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 즉 국제적 환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또는 기준설정 등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때로는 비판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

환경관리인. 1992.6

비록 일찍부터 대처는 못해왔지만 근자에 이르러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순발력을 발동시켜 국제적 환경움직임과 국내환경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최근의 신문기사에서는 財界의 각 협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대기업들은 기업자체에서 환경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관련 변수 또는 요소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 결정에서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여 고무적이다. 다만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이 정책적으로 지원/추진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 노력이 국내의 환경산업과 연결지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 산업 비즈니스의 육성과 활성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특히 환경 기술의 존도의 심화는 바야흐로 국제적인 “환경시대”의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의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모든 환경보전 정책 특히 환경 기술 개발과 보급이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하겠다.

1990년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시설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0.9%로써 선진국 평균 수준 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자기기업이 배출하는 오염이 “별문제”가 없다고 본 기업의 숫자가 77.9%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환경기준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강화가 “무리” 또는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환경 관련 규제가 장기적으로 경제/산업활동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하고 단기적으로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국내환경의 보

존에 우선 초점이 맞추어 지겠으나 이것이 국제적 환경 움직임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국의 환경 정책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본다. 국내의 환경관련 대응 방안은 최근의 기획원 자료가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첫째 기체결된 환경협약에 가입 또는 차질없는 가입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미 몬트리얼의정서에는 가입을 했고 바젤 협약의 가입 시기는 他국의 동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둘째 에너지 자원 절약형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증가, 소비 절약의 시책 추진이 앞서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정밀기기, 유전공학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 그리고 유망 성장 산업위주로 움직여 가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산업구조, 생활양식, 주거패턴 등의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기술개발 투자의 확충, 특히 환경 계측 장비 등 환경관련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공학관련 핵심 및 기본 기술개발은 21세기 선도 기술 개발의 중점 과제로 적극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로 국내 환경기준의 강화, 다섯째로 폐기물 재활용 시책 강화와 재생 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기타 생태보전지역의 확대와 국민홍보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 금년초에 전경련 산업 환경 위원회는 한 책자에서 환경 관련 “기업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환경을 經濟材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과 환경보전의 기업경영 이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社內 환경조직의 보강, 공장 입지선정, 생산기술증설시 환경영향의 우선적 고려, 제품 및 용역 개발시 환경부하의 최소화, 에너지 효율의 제고, 환경기술의 개발과 공유, 예방적 조치의 강구,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국민과의 협조, 국제적인 환경 보전 운동에 참여,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국민과의 협조, 국제적인 환경 보전 운동에 참여, 환경 평가 및 보고의 정례적 실시를 들고 있다. 이대로 지켜진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

다고 보여져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목해 보아야 될 일이다.

Ⅶ.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전략

국내외를 통해 환경문제는 焦眉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문제를 경제성장과 조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체계가 개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은 외부효과를 내부비용으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법 테두리내에서 우선 기울려져 이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면에서도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벌써 국제적으로 일기 시작하는 ‘환경혁명’에 前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의 환경관련 압박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저공해 제품의 개발, 이에 관련된 기술개발, 사회에 대한 환경부문에서의 기여를 통해 차원높은 환경 보전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있을 산업의 변화가 환경 혁명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면 여기에 기업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先進과 開途의 사이에 위치한 우리 경제가 선진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이라는 난관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뛰어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업·정부·시민의 보완적인 분담, 특히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어떠한 경영전략이 필요한지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될 수 있는대로 기피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물론 최근까지 해결이 안된 많은 난제가 산적

해 있겠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환경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해야 한다. 싫던 좋던 국내의 규제강화, 소비자의 압력, 해외의 움직임 등에 직면해야 한다. 즉 경영과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보다 긴 안목을 갖도록 하자.

둘째, 특히 환경운동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급속한 성장을 주시해야 한다. 그들은 오래지 않는 시일내에 상당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맞물려서 공해문제 등이 관심있는 이슈가 된다고 본다.

셋째, 정부의 오염 방지 기준을 오히려 앞서감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 이미지를 널리 고양시키고, 그렇지 않는 타기업과의 경쟁에서 선발기업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공해의 사전처리(왜냐하면 비용이 적으므로) 신규투자의 경우 低公害 시설에의 투자, 그리고 공해처리 기술개발이나 도입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

넷째, 생산·유통과정에서 공해배출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겠다.

이상의 몇가지와 병행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경우 기업의 홍보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수립과정에서 환경관련 전략과 과제가 재정비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둘째, 이에 따른 실제 과제를 수립·실천해야 한다. 예컨대 제품의 환경기준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강화계획을 수립·발표하는 것, 또한 신제품의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해당 기관과의 협력, 공동연구 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구체적인 홍보과정에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셋째, 필요하다면 조직개편과 환경관련직 등

의 개설,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피할 수 있다.

넷째, 좀더 구체적인 제도인 환경회계를 제도화·정제화할 수 있다. 이는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처리 기술의 도입, 장기 환경투자 계획, 조직구조 등의 면에서 개선을 위한 좋은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과학기술정책 기획본부,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3
2. 경제기획원, "지구환경보전 논의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당정협의자료. 1992.5
3. 대한상공회의소,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활동과 정책 제언. 1991.12
4. 양봉민.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 전경련 329호. 1992.4
5. 윤종언. "환경문제와 기업의 대응전략" 환경보전 13권 232호. 1991.7
6. 이상곤. "기업경영과 환경 공해" 서강-하버드 비즈니스39호. 1991.5
7.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활동과 환경정책" 전경련 329호. 1992.4
8. —. "경제의 양적 성장과 환경문제"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발표. 1992.3
9. 이상돈.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한 전망" 환경보전 14권 242호. 1992.5
10. 日經産業신문. 환경비즈니스. 김명사. 1991
11. 전경련.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 투자 규모 추계. 1992.1
12. —. 환경문제와 기업. 1991.12
13. —. 환경문제에 대한 일본 산업계의 대응. 1991.4
14. 환경처 "각종 정책 및 토론 자료", "관련통계"

낭비하면 공해물질 회수하면 유용자원